



의안번호	제 2009 - 6 호
의 결 연 월 일	2009. 2. 19. (제15차 회의)

보
고
안
건

전문위원 업무보고

제 출 자	수석전문위원
-------	--------



목 차

I. 1팀 제22차 회의	1
1. 일시 · 장소	1
2. 참석자	1
3. 주요 안건	1
4. 회의 요지	1
가. 김현석 전문위원의 성범죄 집행유예 기준	1
나. 김현석 전문위원의 성범죄 경합범 처리기준	3
II. 2팀 제14차 회의	4
1. 일시 · 장소	4
2. 참석자	4
3. 주요 안건	4
4. 회의 요지	4
가. 손철우 전문위원의 살인범죄 경합범 처리기준	4
나. 김소영 전문위원의 뇌물범죄 동종경합범 처리기준	5
다. 2009년도 전문위원 연구과제 분장	6
III. 제15차 전체 회의	7
1. 일시 · 장소	7
2. 참석자	7
3. 주요 안건	8
4. 회의 요지	8

가. 손철우, 김소영, 김현석 전문위원의 살인, 뇌물, 성범죄 경합범 처리 기준	8
나. 김현석 전문위원의 성범죄 집행유예 기준	10
다. 2009년도 전문위원 연구과제 분장	11
라. 강도, 횡령·배임, 위증·무고범죄 양형기준안에 대한 공청회에서 제시된 의견 검토	11
 IV. 향후 일정	 17

별첨	손철우, “살인범죄 경합범 기준 보고”
	김소영, “뇌물범죄 동종경합범 기준 검토”
	김현석, “성범죄 집행유예 기준 / 경합범 처리기준”
	전문위원 제2팀, “2009년 연구계획 토의자료”
	전문위원 제2팀, “제14차 전문위원 2팀 회의 보고서”



I. 1팀 제22차 회의

1. 일시 · 장소

- 일시 : 2009. 2. 12.(목) 15:00 ~ 17:30
- 장소 : 대법원 511호 회의실

2. 참석자(5명)

- 김현석, 김한균, 이주형, 이호중 전문위원
- 운영지원단장(간사)

3. 주요 안건

- 성범죄 집행유예 기준
- 성범죄 경합범 처리기준

4. 회의 요지

가. 김현석 전문위원의 성범죄 집행유예 기준

(1) 총론

- 양형인자로 반영된 요소를 집행유예 참작사유로 일률적으로 다시 선정할 경우, 실질적인 이중평가의 위험이 있으므로 재범 위험성과의 관련성 여부 등에 대한 신중한 검토가 필요하다는 의견이 제시됨
- 집행유예의 본질을 재범 위험성 또는 특별예방적 관점에서 파악할 것인지, 징역형을 보다 약한 다른 제재수단으로 대체하기 위한 형사정책적 측면에서 파악할 것인지에 대한 검토

가 필요하다는 의견이 제시됨

- 전자발찌 부착, 청소년 대상 성범죄자의 신상정보 등록 및 열람, 치료감호 등이 모두 재범 위험성을 요건으로 하고 있으므로, 성범죄 집행유예 기준 설정과 관련하여 함께 검토를 진행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이 제시됨

(2) 임신 · 성병 감염

- ‘임신 · 성병 감염’은 최초부터 의도된 경우가 아니라면 재범 위험성과는 무관하다는 의견이 제시됨
- 이에 대하여, 발표자는 위와 같은 의견을 반영하여 위 참작사유를 ‘재범의 위험성’이 아닌 ‘기타 참작사유’로 다시 분류하겠다고 답변

(3) 전과

- 집행유예 참작사유 중 ‘전과’를 재범 기간에 따라 세분화함으로써 단기간에 재범한 경우에는 실형이 보다 적극 권고되도록 집행유예 기준을 설정해야 한다는 의견이 제시됨

(4) 피고인 고령

- 신체적으로 수형이 가능한지 여부를 집행유예 결정 시 고려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으므로 ‘피고인 고령’은 참작사유에서 제외되어야 한다는 의견이 제시됨
- 이에 대하여, 형법 제51조에서 양형의 조건으로 범인의 연령을 참작하도록 명시하고 있으므로 이를 제외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는 반대 의견이 제시됨
- 또한, 고령의 기준을 ‘75세 이상’으로 명시하는 것은 부적절

하다는 의견이 제시됨

(5) 소아기호증

- 소아기호증은 전형적으로 재범 위험성에 관련된 요소로서 집행유예 참작사유로 고려할 필요는 있으나, 행위불법의 정도에 차이를 가져온다고 보기는 어려우므로 특별양형인자로 선정하여 형량범위를 상향조정하는 것은 부적절하다는 의견이 제시됨

나. 김현석 전문위원의 성범죄 경합범 처리기준

(1) 가중 방식

- 제시된 기준은 지나치게 복잡하며, 양형기준의 단순성 추구에 부합하도록 형법상 원칙에 따라 기본범죄 형량범위의 상한만을 1/2 가중하도록 하는 방식이 바람직하다는 의견이 제시됨
- 이에 대하여, 형법상 경합범 가중 방식은 처단형의 한계를 설정하는 원칙에 불과하므로, 양형기준상의 구체적인 경합범 가중 방식이 반드시 그에 따라야 하는 것은 아니며, 제시된 방안이 오히려 책임비례의 원칙을 실현하는 데 적합하다는 반대 의견이 제시됨

(2) 상상적 경합

- 상상적 경합관계에 해당하는 범죄 중 기본범죄에 전형적으로 수반되는 중한 사유는 가중인자로 적절히 추출하는 것이 타당하다는 의견이 제시됨

II. 2팀 제14차 회의

1. 일시 · 장소

- 일시 : 2009. 2. 9.(월) 14:00 ~ 15:55
- 장소 : 대법원 235호 회의실

2. 참석자(5명)

- 김소영, 김용철, 박형관, 손철우, 최석윤 전문위원

3. 주요 안건

- 살인범죄 경합범 처리기준
- 뇌물범죄 동종경합범 처리기준
- 2009년도 전문위원 연구과제 분장

4. 회의 요지

가. 손철우 전문위원의 살인범죄 경합범 처리기준

(1) 용어 정리

- 경합범 관계에 있는 범죄들 중에 가장 중한 범죄를 지칭하는 용어로, ① 보고서와 같이 ‘기본범죄’가 적정하다는 의견과 ② ‘대표범죄’가 적정하다는 의견이 나뉘었으나, 이후 검토를 계속 진행하기로 함

(2) 양형기준의 적용범위

- 양형기준이 설정되지 않은 범죄가 기본범죄일 경우에도 양형

기준이 적용되도록 할 것인지 여부에 관하여, 발표자는 양형 기준은 원칙적으로 기본범죄에 대하여 양형기준이 설정된 경우에 한하여 적용되도록 하는 것이 타당하다는 의견을 제시함

(3) 누적적 합산 원칙

- 발표자가 제시한 경합범 처리기준에 대하여 대체적으로 별다른 이견이 제시되지 않음
- 다만, 살인죄의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양형기준상의 권고 형량을 누적적으로 합산하여 엄중한 형량범위를 제시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소수의견이 제시됨
 - 이에 대하여, 발표자는 누적적 합산 원칙을 적용할 경우 지나치게 중한 형량이 도출되고, 경합범 기준의 일반 원칙에 대하여 불필요한 예외를 설정함으로써 양형기준의 단순성을 추구할 수 없게 된다고 답변

(4) 일부 경합범의 양형인자 반영

- 발표 내용과 같이, 일부 경합범을 기본범죄에 관한 양형기준에서 단순한 양형인자로 반영하는 방식은 바람직하지 않다는 의견이 제시됨
- 이에 대하여, 경합범은 경합범의 유형, 경합범에 해당하는 각 범죄의 경중, 죄질 등에 따라 최종 선고형을 결정하는 데 미치는 영향이 다양하게 나타나므로, 일부 경합범을 기본범죄에 대한 권고 형량범위를 가중하는 양형인자로 처리하는 방식에 아무런 문제가 없다는 반대 의견이 제시됨

나. 김소영 전문위원의 뇌물범죄 동종경합범 처리기준

(1) 합산 원칙

- 발표 내용과 같이, 뇌물범죄의 동종경합범에 대하여 수뢰액을 합산하여 유형을 결정하는 이른바 합산 원칙을 채택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의견이 제시됨
- 이에 대하여, 합산 원칙의 적용을 통해 포괄일죄와 경합범의 처리에 구별이 없어져서는 곤란하다는 의견이 제시됨

다. 2009년도 전문위원 연구과제 분장

- 전문위원 2팀에서는 2009년도 전문위원 연구과제를 아래와 같이 분장하기로 함
- 재범예측성 판단이나 양형기준안 효과 분석 등의 주제는 통계분석이 필요한 과제이므로, 운영지원단이나 보조인력의 연구지원이 요구된다는 데 대체적인 의견이 모아짐

연구 과제	세부 과제	주무 전문위원	제출 시기
양형기준 매뉴얼 작성	○ 양형기준 매뉴얼 총론	* 전체회의에서 논의	
	○ 살인 양형기준 매뉴얼	손철우 (박형관)	3. 중순
	○ 뇌물 양형기준 매뉴얼	김소영 (김용철)	3. 중순
	○ 무고 양형기준 매뉴얼	이천현	3. 중순
	○ 위증 양형기준 매뉴얼	최석윤	3. 중순
1기 양형기준 시행을 위한 추가 연구	○ 벌금형 기준	각 주무 위원	2.말
	○ 경합범 기준		
집행유예 기준	○ 집행유예 부가조건에 관한 연구	박형관 /손철우 /최석윤	6.말
재범예측성 판단	○ 재범 예측성 판단기준	이천현 /최석윤	7.말

연구 과제	세부 과제	주무 전문위원	제출 시기
	○ 재범 예측인자 추출		
	○ 재범 예측연구의 양형기준 반영 기준 가능성		
양형기준안 효과 분석	○ 효율적 분석을 위한 세부 방안 (분석틀)	박영식 (손철우, 박형관)	3. 중순
	○ 수용인원의 변화		4. 말
	○ 보호관찰소 등 교정자원에 미치는 영향		
형사실체법 정비방안	○ 일반적 형벌체계의 합리화 방안	* 전체회의에서 논의	
	○ 법정형 불균형 현상의 개선 방안 - 1기 양형기준 시행 대상 범죄 - 기타 범죄	(각 주무위원)	”

- 그밖에, 연구주제에 따라서는 교정 또는 보호관찰 공무원의 참여가 필요하다는 의견과 적정한 자문위원단의 운영이 필요하다는 의견 등이 제시됨

Ⅲ. 제15차 전체 회의

1. 일시 · 장소

- 일시 : 2009. 1. 13.(금) 14:00 ~ 19:00
- 장소 : 대법원 1601호 회의실

2. 참석자(10명)

- 수석전문위원, 김한균, 김현석, 박형관, 손철우, 이주형, 이호중, 조국, 최석윤 전문위원

- 운영지원단장(간사)

3. 주요 안건

- 살인, 뇌물, 성범죄 경합범 처리기준
- 성범죄 집행유예 기준
- 강도, 횡령·배임, 위증·무고범죄 양형기준안에 대한 공청회 제시 의견 검토
- 2009년도 전문위원 연구과제 분장

4. 회의 요지

가. 손철우, 김소영, 김현석 전문위원의 살인, 뇌물, 성범죄 경합범 처리기준

(1) 양형기준의 적용범위

- 양형기준이 설정된 범죄와 양형기준이 설정되지 않은 범죄가 경합된 경우에 어떠한 조건 하에 양형기준이 적용되도록 할 것인지 여부에 관하여 아래와 같이 의견이 나뉨
- 발표자는 원칙적으로 양형기준이 설정된 범죄끼리 경합되는 경우에 한하여 양형기준이 적용되도록 하는 것이 타당하며, 양형기준이 미설정된 범죄가 경합범으로 포함된 경우에는 양형기준이 설정된 범죄의 양형기준상 권고 형량 하한을 준수하도록 권고하는 것으로 충분하다는 의견이 제시됨
- 이에 대하여, 재판부에서 양형기준이 설정된 범죄를 기본범죄로 정한 경우에는 양형기준이 적용되고, 반대로 양형기준이 미설정된 범죄를 기본범죄로 정한 경우에는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않는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므로, 판결문상에 재판부가 기본범죄로 판단한 범죄를 나타낼 필요가 있다는 의견이 제시됨

(2) 살인범죄에 대한 누적적 합산 원칙

- 국민의 법감정 등을 고려할 때 살인범죄의 동종경합범에 대해서는 양형기준상의 권고 형량을 누적적으로 합산하는 방식을 적용해야 한다는 의견이 제시됨
- 이에 대하여, 권고 형량을 단순 합산할 경우 제시되는 형량 범위가 지나치게 상향될 우려가 있으며, 경합범 기준의 일반 원칙만을 적용하더라도 특히 참작할 사유가 있는 살인에 해당되지 않는 보통 동기에 의한 살인의 경우에는 권고 형량이 15년을 포섭하게 되어 무기형의 선택이 가능할 뿐만 아니라, 복수의 특별가중인자로 인한 형량범위의 특별조정까지 두고 있는 이상 별도의 합산 원칙을 도입할 필요가 없다는 데 대체적인 다수의견이 모아짐
- ☞ 살인범죄 동종경합범에 관한 실제 선고결과를 분석한 후에 누적적 합산 원칙의 채택 여부를 다시 검토하기로 함

(3) 뇌물범죄 동종경합범의 합산 원칙

- 발표 내용과 같이, 뇌물범죄 동종경합범에 대하여 합산 원칙을 적용하기로 하는 데 별다른 이견이 제시되지 아니함
- 다만, 뇌물 수수액을 합산한 결과 유형이 달라지지 않는 경우에는 상한만을 조정하는 일반적인 경합범 기준을 적용하고, 합산 후 유형이 바뀌는 경우에 한하여 합산 원칙을 적용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소수의견이 제시됨

나. 김현석 전문위원의 성범죄 집행유예 기준

(1) 총론

- 집행유예의 본질에 관하여, 비교적 가벼운 징역형을 선고할 경우에 형벌 대체수단을 적극 활용하는 데 중점을 둘 것인지, 재범의 위험성과 관련된 특별예방적 차원을 중시할 것인지에 대한 검토가 필요하다는 의견이 제시됨

(2) 참작사유의 분류

- 순수하게 재범 위험성에 관련된 요소만을 '재범의 위험성'으로 분류하고, 극도의 성적 수치심 증대, 위험한 물건의 사용 등과 같이 행위의 수단이나 결과에 관련된 요소는 '기타 사유'로 분류하는 것이 타당하다는 의견이 제시됨

(3) 추행의 정도가 약한 경우

- '추행의 정도가 약한 경우'가 책임이 경미한 영역에 속하는 것은 사실이지만, 낮은 정도의 불법이더라도 전과가 있는 등 반복의 우려가 있다고 판단될 경우에는 재범의 위험성이 높다고 볼 수 있으므로 집행유예의 주요 긍정사유에서 배제하여야 한다는 의견이 제시됨

☞ 의견 제시자는, 만일 집행유예의 본질을 특별예방적 차원이 아니라 선고형이 비교적 낮은 경우에 형벌 대체수단을 제공하는 차원에서 파악한다면, 위와 같은 사유가 주요 긍정사유로 유지되어도 무방하다는 보충의견을 제시함

다. 2009년도 전문위원 연구과제 분장

- 양형기준 총론 매뉴얼 작성은 원칙적으로 손철우 전문위원이 담당하되, 이주형 전문위원도 병행하여 연구를 진행할 수 있도록 함
- 일반적 형벌체계의 합리화 방안은 김한균, 이호중 전문위원이 공동으로 담당하기로 함
- 양형기준안 효과 분석 연구와 관련하여, 운영지원단에서 기본틀에 대한 연구를 진행하여 제시하기로 함

라. 강도, 횡령·배임, 위증·무고범죄 양형기준안에 대한 공청회에서 제시된 의견 검토

(1) 강도범죄 양형기준안

(가) 특수강도 범행(사망의 결과가 발생한 경우)

- 공청회에서, 사망의 결과가 발생한 경우에 ‘특수강도 범행’을 양형인자로 추가해야 한다는 의견 제시
- 전문위원단에서는, 아래와 같이 의견이 대립함

◆ 찬성 ◆

- 상습·누범강도에 있어서 ‘특수강도 범행’이 일반가중인자로 선정되어 있으므로, 사망의 결과가 발생한 경우에도 일반가중인자 정도로 추가하는 것이 바람직함

◆ 반대 ◆

- 사망의 결과가 발생한 경우에는 기본적으로 형량 자체가 중할 뿐만 아니라, 강도범행의 특성보다 사망의 결과가 양형에 있어 보다 중하게 고려되어야 하므로 가중인자로 추가할 필요가 없음

(나) 상당한 피해액

- 공청회에서, ‘상당한 피해액’을 집행유예 결정 시 주요 부정 사유로 추가해야 한다는 의견 제시
- 전문위원단에서는, 아래와 같이 의견이 대립함

◆ 찬성 ◆

- 재산범죄에 속하므로 피해액이 집행유예 결정에 있어서도 반영되는 것이 바람직함

◆ 반대 (다수의견) ◆

- 형량 기준에서 ‘금융기관 강도’, ‘경미한 액수의 금품강취를 의도한 경우’ 등 피해액과 관련된 양형인자를 반영한 상태에서 별도의 집행유예 주요 부정사유를 추가할 필요는 없음
- 구체적인 금액 기준을 현실적으로 제시하기가 어려움
- 피해액은 대표적인 결과불법적 요소로서 재범 위험성과는 관련성이 크다고 보기 어려움

(다) 성범죄와 강도범죄 양형기준의 통일성 확보

- 성범죄와 강도범죄는 대표적인 강력범죄에 속하는 범죄유형으로 공통적으로 상해, 사망의 결과가 발생한 경우를 별도로 유형으로 설정하는 등 상호간에 양형기준의 통일성과 정합성이 확보되어야 할 필요성이 높음에도, 구체적인 양형인자와 집행유예 참작사유 등에 있어 일관되지 못한 부분이 있으므로, 향후 위 기준들 사이에 통일성을 확보하기 위한 추가 검토가 필요하다는 데 의견이 모아짐

(라) 강도범죄 형량범위의 조정

- 상해의 결과가 발생한 경우에 ‘경미한 상해 또는 과실로 인한 상해’가 특별감경인자로 추가됨으로써 전체적으로 양형의 불합리한 역전 현상이 나타나는 부분이 있는바, 이를 해소할 수 있도록 형량범위 조정에 관한 연구를 김현석 전문위원이 진행하기로 함
- 예컨대, 1개의 특별가중인자가 수반된 특수강도 사안에서, ‘경미한 상해’라는 특별감경인자가 추가되면 ‘4년 ~ 7년’의 기본형량범위가 권고되는 반면, 아무런 상해가 발생되지 않은 경우에는 오히려 이보다 높은 형량범위(5년 ~ 8년)가 권고됨

(2) 횡령·배임범죄 양형기준안

(가) 감경인자 추가

- 공청회에서, 제시된 양형인자 외에도 ① 초법규적 책임감경요소 또는 사실의 착오나 법률의 착오에 있어서 정당한 이유가 인정되지 않는 경우이지만 행위자에 대한 비난정도가 크지 않은 경우, ② 명의신탁의 유형에 따라 횡령죄나 배임죄의 성립 여부에 관하여 판례와 학설이 나뉘는 경우 등을 추가적인 감경인자로 반영하여야 한다는 의견 제시
- 전문위원단에서는, 아래와 같이 의견이 대립함

◆ 찬성 (다수의견) ◆

- 유무죄의 판단과 달리, 법률상 정당한 이유가 인정되지 않더라도 참작할 만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감경인자로 반영하는 것이 타당함
- 다만, ‘임무위반 정도가 경미한 경우’, ‘오로지 피해자 회사

이익을 목적으로 한 행위인 경우’ 등의 기존 양형인자에 포섭할 수 있는지, 별도의 양형인자로 추가할 필요가 있는지 등에 관해서는 추가 검토가 필요함

◆ 반대 ◆

- 위법한 행위로서 정당한 이유가 없다고 판단되는 경우를 감경인자로 추가할 경우 이를 근거로 기업범죄에 대해 지나치게 관대한 양형이 권고될 우려가 있음

(나) 감경인자의 축소

- 공청회에서, 실질적 1인 회사나 가족회사의 경우 ‘오로지 피해자 회사 이익을 목적으로 한 경우’, ‘손해발생의 위험이 크게 현실화되지 아니한 경우’ 등에도 중복 적용될 우려가 있으므로 양형인자를 적절히 축소해야 한다는 의견 제시
- 전문위원단에서는, 아래와 같이 의견이 대립함

◆ 찬성 ◆

- 특히, 1인 회사의 경우에는 복수의 양형인자가 중복 적용되어 관대한 양형이 권고될 우려가 높음

◆ 반대 ◆

- 1인 회사의 경우에 중복 적용되는 부분이 생길 수 있으나, 이는 인자 상호간의 본질적 중첩에 기한 것이 아니므로, 오히려 개별 사안에서 적정한 양형을 도출하는 데 기여함
- 1인 회사 등의 개념을 엄격하게 규정함으로써 문제점을 보완

- 공청회에서, ‘피해자 처벌불원(합의)’과 ‘상당부분 피해회복된 경우’가 중복 적용될 우려가 있으므로 이를 통합해야 한다

는 의견 제시

○ 전문위원단에서는, 아래와 같이 의견이 대립함

◆ 찬성 ◆

- 재산범죄에서 상당부분 피해회복된 경우에는 합의도 성립될 가능성이 높으므로 중복 적용될 우려가 높음

◆ 반대 ◆

- 횡령·배임범죄에서 상당부분 피해회복되고 합의도 이루어진 경우, 피해회복 없이 합의만 이루어진 경우, 상당부분 피해회복하였으나 합의에 이르지 못한 경우 등에 관해 적절한 형량차이를 부여함으로써 개별 사안에서 적절한 양형을 도출하고, 피해자의 피해회복을 실질적으로 보장

○ 공청회에서, ‘범죄수익의 대부분을 소비하지 못하고 보유하지도 못한 경우’, ‘피해기업에 대한 소유지분 비율이 높은 경우’, ‘사회발전에 기여한 공적이 구체적으로 증명된 경우’ 등을 삭제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 제시

○ 전문위원단에서는, ‘사회발전에 기여한 공적이 구체적으로 증명된 경우’에 대해서는 아래와 같이 의견이 대립하였고, 나머지 인자들에 대해서는 일반인자 정도로는 유지하는 데 대체적인 다수의견이 모아짐

◆ 찬성 (다수의견) ◆

- 일반양형인자는 한정적인 의미를 갖는 것이 아니므로, 대외적으로 논란의 소지가 있는 ‘사회발전에 기여한 공적’을 양형인자에 포함시킬 필요가 없음

◆ 반대 ◆

- 행위자적 요소인 전과가 형량에 반영되어야 하는 것과 동일한 논거에서 ‘사회발전에 기여한 공적’도 당연히 양형인자로 고려되는 것이 타당함

(다) 집행유예 참작사유의 축소

- 공청회에서, ‘약물중독, 알코올중독’, ‘피해자가 피고인의 엄벌을 탄원하는 경우’ 등의 사유를 집행유예 일반 참작사유에서 제외하여야 한다는 의견 제시
 - 전문위원단에서는, 위 요소들을 집행유예 고려 요소에서 제외하는 것이 타당하다는 데 대체적인 다수 의견이 모아짐
- 공청회에서, 양형인자 부분에서 삭제·통합을 주장한 사유에 대해서는 집행유예 참작사유에서도 삭제 또는 통합해야 한다는 의견 제시
 - ☞ 이에 대해서는 양형인자 부분에서 충분히 논의되었으므로 별도 논의를 진행하지 아니함
- 또한, 집행유예 참작사유 중 ‘기본적 생계·치료비 등의 목적이 있는 경우’와 ‘범행동기 참작’이 중복 적용될 우려가 있다는 의견이 제시됨

(3) 위증·무고범죄 양형기준안

(가) [위증범죄] 피고인 또는 친족의 이해관계로 인한 경우

- 공청회에서, ‘피고인 또는 친족의 이해관계로 인한 경우’를 위증범죄에 대한 감경인자로 반영해야 한다는 의견 제시
- 전문위원단에서는, 대체로 종전안을 그대로 유지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데 의견이 모아짐

- 제시된 기준안에서 ‘경제적 대가를 수수한 경우’나 ‘소극가담’ 등을 별도의 양형인자로 추출한 상태에서 이해관계 여부만을 이유로 일률적으로 행위책임을 가중하거나 감경하는 것은 부적절함

(나) [무고범죄] 비난 동기

- 공청회에서, ‘피무고자에 대하여 아무런 권리를 갖고 있지 않았던 경우’ 또는 ‘피무고자에 대한 민·형사상 책임을 면하려고 무고한 경우’를 무고범죄에 대한 가중인자로 추가해야 한다는 의견 제시
- 전문위원단에서는, 아래와 같이 의견이 대립함

◇ 찬성 ◇

- 일반감경인자인 ‘참작할 만한 범행동기’에 대응하여 범행동기와 관련된 일반가중인자를 신설하는 것이 바람직함

◇ 반대 ◇

- 목적범인 무고죄에 있어 피무고자에 대한 형사처분 등을 통한 경제적 이익 추구 또는 관련 민사소송에서의 유리한 지위 확보 등의 비난 동기는 기본적 유형에 해당함
- 가중인자로 추가할 경우, 양형심리가 민사적 실체관계의 존부로 확대되는 문제점이 발생

IV. 향후 일정

- 전문위원 제16차 전체회의는 양형위원회 제15차 회의 결과를 참조하여 3월 초순경에 개최하기로 함